

정책제언 I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정부 행·재정적 우선 지원을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장들이 함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해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 및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12개 시·군을 포함,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과 정부가 공동 협력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022년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의 89개 지자체는 2023년 국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지자체들은 이 자리에서 지역별 현안 과제를 알리고 이들 지역에 대한 특례 발굴과 재정보조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중점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생활인구’ 산정 대상 지역을 지난해 7개 시범지역에서 올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또 2025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개선해 각 지자체의 평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와 민간의 재원을 연계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안내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모금방법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연간 기부액 상한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민간플랫폼에서도 기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지방의 인구 대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따라서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의 협조체계 구축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지역도 다르고 지자체마다 대응전략도 다르지만 모두가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데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인구 정책 전문성을 높이고 지자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제도 혁신, 정책 반영 및 예산 지원 등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인구감소지역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길 기대한다.

출처 : 강원일보 오피니언

정책제언 II

외국인 관광객 유치, 치밀한 서비스 전략 마련해야

정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을 유치해 관광 수입 245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12월 2023~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하면서 발표한 2027년까지 관광객 3,000만명 유치, 관광 수입 300억달러 달성 목표를 위해 올해부터 총력전에 나선다. 때맞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앞으로 국내외 여행업계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상품개발 초청 팸투어, 한국관광공사 공동 핵심시장 대상 강원관광 로드쇼 개최, ‘2024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한 본격적인 해외시장 공략 등 다각적 홍보마케팅에 박차를 가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린다. 후방효과가 엄청나고 부가가치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도의 경우 2023년 90개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연계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외국인 관광객 2만4,435명, 3만6,134박 유치, 지출액 한화 약 300억원(2,328만3,659달러)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파악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520억원, 취업 유발 549명, 부가가치 유발 150억원 등으로 측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민 1,779.9명분의 소비액을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2년(385.5명) 대비 362% 증가한 수치다. 관광산업은 연기 내뿜는 공장이 연상되는 전통적인 제조업과는 사뭇 다르다. 이동수단이 다양화·보편화되면서 잠재적인 수요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그래서 국내는 물론 나라마다 관광객 모으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관광이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은 상당수 국가는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올림픽 유산 등 훌륭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강원자치도로서는 관광이 중요한 산업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치명적인 단점으로 지적돼 온 접근성은 도로, 철도 개설 등으로 점차 나아지고 있다. 이젠 지역 곳곳에 산재한 구슬을 꿰어 보물로 만드는 작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산업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면 스쳐 가는 관광에서 머무르고 즐기며 체험하는 관광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콘텐츠와 치밀한 서비스 전략뿐만 아니라 독보적인 관광모델 개발도 요구된다. 명소 중심의 관광에 갇히지 말고 음식·한류·스포츠·공연 등 내용 중심의 체류·체험형 여행으로 확산해야 한다. 저가 덤핑 상품, 바가지요금 근절은 기본이다. 섬세한 고품격 서비스 체험이 강원관광의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게 해야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다.

정책제언III

강원 철도 국가사업 관철돼야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중 하나인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도로와 철도 연결은, 물류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토대로 신산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 개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도가 12조 5000억원 규모 철도 사업의 국가 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철도 노선 개선은 특별자치도 성패를 좌우할 사안인 만큼, 도의 노력과 정부의 관심이 더해져 조기에 가시화하기를 바랍니다.

도가 추진하는 철도망 계획은 도내는 물론, 타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도는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일반철도 7개 사업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각 노선은 도내 철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됩니다. 철원군과 원주시, 춘천시를 관통하는 원주~춘천~철원 철도는 영서와 영동을 잇는 ‘격자형 순환 철도망’을 구축합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등 남부 권역과 직결돼 한반도 중앙을 종단하는 내륙 물류 축으로도 기능할 전망입니다.

제천~평창 철도는 중부내륙과 강원도를 이어 기존 100km에 달하는 이 구간 거리를 절반으로 단축합니다. 제천~삼척 고속화 사업은 강원 남부지역과 도내 고속교통망을 30분 내 연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원선 연천~철원 전철화는 강원 북부 관광수요를 늘리고, 평창 사북 철도 고속화 사업은 청량리와 정선 구간을 1시간 대로 연결하는 등 강원 남부권의 교통망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고성 연결선과 춘천~속초 철도는 동해안 항만과 연계한 미래 화물 물동량 확보와 관련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공약사업인 GTX-B 노선 춘천 연장과 GTX-D노선 원주 신설 사업은 강원도의 광역 수도권화를 견인할 교통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GTX-B 노선의 춘천 연장 총사업비는 최대 4238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합니다.

강원지역 철도망 건설에 대한 당위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결단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강원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국토 균형발전도 요원해집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과 혜택을 얻기 위해서도 반드시 관철해야 할 과업입니다.

정부동향 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 모두가 쉽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UI 플랫폼 서비스 개시!

- 과기정통부, 쉬운 키오스크 제작을 위한 UI 가이드 및 개발 도구 등 제공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고령층·장애인 등 정보접근성이 보장된 키오스크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키오스크 UI 플랫폼(www.wah.ok.kr)'을 3월 26일(화)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그간 키오스크 개발·제조사는 디지털 기기 이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산, 인력 및 전문기술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3년부터 사업을 추진, 고령층·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만들 수 있도록 UI 가이드 원칙*'을 수립하고 통합 UI 개발지원 도구를 개발하는 등 제조사, 운영사 등이 별도의 비용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UI 플랫폼을 구축했다.

 - * '사용자 중심 UI', '사용자에 최적화된 UI', '직관적인 UI', '조작하기 쉬운 UI', '지속 가능한 일관된 UI', '개인의 정보가 보호되는 UI' 등 6개 원칙
- 키오스크 UI 플랫폼은 서비스 유형을 크게 유통형, 주문형, 발권형, 안내 및기타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쉽고 일관되게 UI를 설계할 수 있도록 디자인 지침인 'UI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점자표시, 수어 안내 등에 대한 지침과 휠체어 탑승자를 위한 낮은 자세 모드 등을 함께 제공하여 모든 사용자가 불편없이 키오스크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또한, 키오스크 화면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아이콘, 사운드, 템플릿 등에 대해서 저작권이 없는 'UI 리소스'를 제공하며, 개발자가 최적의 UI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 보장 여부도 함께 검증할 수 있는 '통합 UI개발지원 도구'를 제공한다.
- 그리고, 제조사·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UI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사전체험을 지원하는 사용자 서비스 및 키오스크 교육 동영상과 사용자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통일된 용어 및 문구를 안내하는 용어 가이드를 함께 제공한다.
- 이렇게 UI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은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18조」에 따른 키오스크 접근성 검증 기준을 준수(소프트웨어에 한정)하는데 있어 키오스크 제조사 및 운영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정보접근성이 보장된 키오스크를 국가기관 등에서 우선구매하는 지능정보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접근성이 검증된 키오스크 제품의 현황정보(제품 스펙, 설치장소 등)를 키오스크 UI 플랫폼을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정보접근성 보장 키오스크 확산을 위해 공공·민간분야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하고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 협의체*' 등을 통해 민간협력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 57개 회원사 참여(제조사 44개, 운영사 4개, 기타 9개, '24.3월 기준)
-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플랫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UI 가이드 및 리소스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지원과 개발사 및 운영사 대상 교육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하면서
- "국민들이 불편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적극 협력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및 관련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동향 II

국토교통부



알뜰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 받으세요

- 5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하는 K-패스 사업 시행 -
- 올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회원 전환하여 기존 카드로 K-패스 혜택 적용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 K-패스 출시에 앞서,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시행 중*이다.

 - * 3.4일부터 진행하였으며, 3.21(목) 기준 약 118만명 중 22.5만명 전환 완료
 -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에 편의성과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 * [기존 : 알뜰교통카드] 도보·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환급(출발·도착 기록 필요)
 - [개선 : K-패스]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20~53% 환급(출발·도착 기록 불필요)
- K-패스를 이용하려면 K-패스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은 후 카드 등록 등을 위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회원전환 절차*만 거처도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알뜰교통카드 회원정보의 이관, K-패스 이용약관 등에 대한 이용자 동의 필수
 - 회원전환은 쉽고 간단하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또는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① 알뜰교통카드 카드번호 입력, ② 주소지 인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입력, ③ 이용약관 등 동의만 하면 된다.(참고자료 첨부)
 - * (앱) 알뜰교통카드(~4.30까지 이용가능) / (누리집) www.alcard.kr(~6.30까지 이용가능)
 - 4월 30일까지 전환을 완료한 이용자는 K-패스가 시행되는 5월 1일부터 즉시 K-패스 혜택을 적용받는다. 전환을 미리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는 회원 전환을 완료하기 전까지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 회원 전환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6.30까지 가능
- 국토부는 K-패스 BI(브랜드이미지)와 홈페이지·앱 디자인(안)도 공개하였다. K-패스 BI는 이용자 설문(1.29~30, 1.6만명) 등을 거쳐 선정했다. 홈페이지·앱 디자인(안)은 국토교통부 2030자문단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p>K-패스 BI</p>	<p>모바일 앱 아이콘(안)</p>	<p>홈페이지·앱 메인화면(안)</p>

- 특히, K-패스 BI는 버스, 지하철과 교통카드를 형상화하는 사각형 이미지 안에 사업 명칭을 표기하였다. “K”와 “스”의 끝을 연결함으로써 전국 단위 사업으로서 전국 지자체와의 협력 의미도 강조하였다.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5월 1일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자체·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시스템·앱·홈페이지를 개발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 또한,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분들이 편하게 K-패스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카드사와 함께 알뜰교통카드→K-패스 회원 전환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 K-패스 신규 사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활용하여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동향III

관계부처합동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 「강원특별법」 위임사항을 담은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 전부개정 「강원특별법」 시행('24.6.8.)에 차질 없도록 준비 -

-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령안」을 3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23.6.7.)에 따라 시행일('24.6.8.) 전에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 먼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례와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 강원특별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법」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였다.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은 특구 지정요건으로 국립·정부출연 연구기관이 3개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2개 이상으로 완화한다.
 -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운영 등)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정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현재,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평균경사도가 15~25도 이하로 지정되어 있으나 35도 이하로 완화되고, 표고 기준도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된다.
 -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11개 기관 명시
 - ** (평균경사도) 15~25도 이하 → 35도 이하, (표고) 50% 미만 → 80% 미만
- 이와 함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특례 운영평가에 관한 내용도 시행령에 마련된다.
 - (종합계획 수립 절차·방법 등) 법에서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종합계획 수립절차·방법과 도의회 동의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종합계획의 고시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세부 내용을 마련하였다.
 -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종합계획안이 마련되면 일반 주민에게 14일 이상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때, 도지사·시장·군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 * 총사업 규모의 100분의 10 이내 변경, 다른 법령내용 반영, 명백한 오류 수정 등
 - ** 종합계획을 수립·변경·폐지한 경우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하도록 함
 - (농업·환경분야 특례 운영평가) 법에서 농업·환경분야 특례의 존속기한(3년) 종료 3개월전까지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특례 연장여부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평가의 방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였다.
 - * 평가계획 수립(농식품부·환경부장관) → 평가계획 통보(→강원자치도) → 평가 실시(위원회 자문, 평가단 구성·운영) → 평가결과 통보(특례 연장 또는 폐지 여부 등)
- 행정안전부는 3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기간(4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정부는 4대 분야(군사·산림·농업·환경) 규제완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6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 이번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선도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동향Ⅳ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새로운 시도, 중기부-행안부-지자체 협력 강화

- 부처 협업,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에 22개 과제 예비선정 -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 사업 및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지원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과제를 공모하여 우수과제 22개를 예비선정했다고 밝혔다.
-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제를 기획하면, 중기부와 행안부가 함께 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소프트웨어)과 지방소멸대응기금(하드웨어)을 공동 지원하여 지방소멸대응 정책의 동반상승(시너지)을 창출코자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되어 12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 대표적으로 충청남도 부여군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단지를 고도화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복합단지(컴플렉스) 조성'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농식품 기업에게 재배품목 실험(테스트),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단지에 기숙교육센터, 실습농장 등을 조성한다.

우수사례 : 스마트팜 콤플렉스 조성 및 농업기업 육성 지원(충남 부여군)

- **(주요내용)**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중기부 시군구연고산업육성, 부여군 창업사업 등을 활용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과 창업교육, 기업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
- **(행안부)** 지능형(스마트) 농부 기숙교육센터 : 영농법인 교육장, 기숙사형 숙박시설기숙사형 숙박시설 지능형(스마트)경영 실습농장 : 시험장(테스트베드), 작물별 실습농장
- **(중기부)** 재배품목 테스트, 품질 개선, 시제품 제작 등 지원
- **(부여군)** 예비창업자 현장실습, 창업 모의실험(시뮬레이션) 등 지원

- 올해에는 107개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공모한 결과, 34개 기초지자체에서 과제를 신청하였고, 충북 옥천군, 강원 삼척시 등 22개 기초지자체의 과제가 예비 과제로 선정되었다.
- 이번 공모사업에 예비선정된 주요 과제들을 살펴보면,
- 충청북도 옥천군의 '묘목산업 고도화' 과제는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묘목 기업 종사자의 임대주택 건립을 통해 근로자 유입을 유도하고, 중기부는 묘목 기업에게 기술애로 해소와 디자인 개선,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강원도 삼척시의 '수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 고도화' 과제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수소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업단지에 입주한 수소기업은 중기부 사업을 통해 상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 상담(컨설팅), 기업 맞춤형 시장조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금번 선정된 22개 예비과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전략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시 우대 할 예정이다.
- 또한, 22개 예비 과제 중 추후 확정될 예산 규모에 맞추어 최종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며, 최종 과제는 '25년부터 중기부 기업지원 사업과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지방소멸의 효과적인 대응을위해 정부의 칸막이식 지원에서 벗어나 부처 협업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관계부처·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지방소멸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브리프 |

2024년 지방행정 트렌드

유수동 |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주요내용

급격한 사회·기술·경제·정치적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추세와 방향을 예측하여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
-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 등을 통해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를 분석하고 능동적·미래 지향적인 대응 전략을 준비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기대함

2024년 8대 지방행정 트렌드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전략적 접근 강화
- **지역인재와 지역일자리:**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인재 육성 재구조화
- **안전관리 및 재난위기 대응:** 재난·안전관리 회복력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 **지역 보건·의료와 시민건강:** 보건의료 불평등 완화와 사회적 안전망 확대
- **자치역량과 책임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 **디지털혁신 생태계:**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행정의 문제해결력 강화
- **교육자치와 교육혁신:** 교육 수요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균형잡힌 지역성장 생태계 조성

기존 미래연구의 한계 극복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구체적인 정책방향 설정에 대한 현실 가능성과 체감도 제고
 -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미래 트렌드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국가 전체차원의 분야별 트렌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함
 - 기존 미래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핵심적인 논의 수준을 지방행정 분야로 확대 하였다는 점에서 구체적이며,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01 미래예측은 선택이 아닌 필수

지방행정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전략적 대응 요구 증대

- 급변하고 있는 사회·기술·경제·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등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디지털혁신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이슈들이 존재 하고 있음

|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분석의 필요성

-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의 바람직한 미래모습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 필요
- 미래환경변화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02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와 정책방향

|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 및 거시적 환경분석

- 해외자료들은 세계 전체 차원과 국가 전체 차원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국내자료들은 국가 전체 차원과 기술 차원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어 지방행정과 같은 종합행정 분야에의 적용에는 한계가 존재함
-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대한 STEEP 분석, ChatGPT-4를 활용한 STEEP 분석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중복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하위 요인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STEEP 분석 결과 종합 •

구분	구성 요소		
사회적 요인(S)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갈등의 증가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기술적 요인(T)	디지털 기술혁신	디지털 대전환	제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경제적 요인(E)	COVID-19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 극복	팬데믹 이후 소득양극화 심화 극복	디지털 기반 경제구조 전환
환경적 요인(E)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자원부족의 시대 진입	심각한 국제질병의 증가
정치적 요인(P)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 증대	시민주도 공공서비스 제공	정부-시민 간 수평적 소통구조 형성

| 미래사회 주요 이슈와 지방행정

- 미래예측방법론에서 주로 사용되는 퓨처스 휠 기법을 적용하여 STEEP 분석결과의 상호 연관관계를 살펴보고, 미래 사회의 핵심 동인을 도출하였음

• 미래사회의 핵심 동인 (주요 키워드) •

인구구조	사이버 범죄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	정치참여
사회갈등	4차 산업혁명	양극화	지속가능개발	지방자치

-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해 미래사회 핵심 동인에 관한 토픽 및 키워드, 토픽 비중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해 관련 학술논문의 국문초록과 키워드를 검토하여 미래사회 주요 이슈의 개념을 정의하였음
- 미래사회의 핵심동인별 10개의 이슈 (총 100개) 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슈별 중복성, 지방행정과의 관련성, 한국적 맥락 등을 검토하여 총 8가지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를 도출하였음

|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와 정책방향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전략적 접근 강화
 - 전략적·장기적 관점의 계획수립·추진과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협업 활성화, 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과 인센티브 제공, 디지털기술 적극 활용 등

- (지역인재와 지역일자리)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인재 육성 재구조화
 - 특성화 산업 선정 기획단계부터 유관 대학과의 협력체계 구축, 취업-교육 연계성 확보, 지역혁신을 위한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등
- (안전관리 및 재난위기 대응) 재난·안전관리 회복력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 장기적 방향에서 사회·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재난·안전관리 접근방식 유도, 민간·지역사회 촉진 및 협력 거버넌스 구축, 신기술 적극 도입·활용을 통한 재난관리 역량 강화 등
- (지역 보건·의료와 시민건강) 보건의료 불평등 완화와 사회적 안전망 확대
 - 인간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 불평등 완화, 의료기술 혁신에 따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 마련,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를 위한 인력양성 정책의 체계적 추진 등
- (자치역량과 책임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수평적 관계 재설정, 기능별 초광역화 맞춤형 분권 추진을 위한 차등적 분권방식 논의 활성화, 주민 중심 소규모 지역기반 자치 확대 등
- (디지털혁신 생태계)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행정의 문제해결력 강화
 - 온라인 플랫폼 형식의 활동 분야 매칭을 통한 시민사회 공간 창출, 지역 단위 다양한 사안의 지방의회 의제화, 시민 참여형 스마트시티 조성 등
- (교육자치와 교육혁신) 교육 수요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미래교육의 세부적 사업 설정 및 명확한 자원 산출 근거 도출, 중장기적 관점의 교육재정 구조 개편 논의 활성화 등
-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균형잡힌 지역성장 생태계 조성
 - 자원환경 및 사회·경제적 측면의 균형, 탄소중립 및 녹색경제 전환, 지역의 녹색경제 생태계 강화, 지역 수준의 역할 강조, 국가-지역 수준 간 연계 강화 등

03 지방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지방행정의 도전과제

- 미래사회에 대응하여 더욱 발전된 사회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혁신적인 접근방법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함
 - 장기적 관점의 정책결정,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의사결정역량과 문제해결역량 제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함

지방행정의 도전과제

구분	주요 내용
정부 및 공공정책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정책과 제도의 도입, 실행 • 예산·인력 등 각종 자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및 기능 이양
과학기술과 혁신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및 기술혁신 투자 • 과학기술·혁신 부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자원 제공 • 신기술의 개발과 적용 촉진
역량과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혁신 • 다양한 미래 직업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민간자원의 적극 활용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 제고 •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조직문화 조성 • 정책수립에 다양성 반영

주민참여와 사회적 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사회적 연대 강화 다양한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창조 활성화 및 정부지원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 활성화 친환경 기술 및 실천 촉진, 참여 및 홍보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호정책 수립
글로벌 협력과 국제사회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활동 참여 활성화 국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과 협력을 위한 지역 내 노력 활성화 국제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권한과 자원 제공 	

출처 : 유수동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정책브리프 II

지역주도적 균형발전정책으로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의의

이 소 영 | 지역균형발전실장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의 수립

- 2021년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2022.5.)
-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들이 속한 11개 시도 및 국가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 시군구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가 수립한 기본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
- 지역 스스로 기획하여 지역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적 계획 수립방식이 본 계획의 가장 큰 의의임

지역별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의 내용분석

- 100개 지역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건수는 총 4,667건으로 나타났으며, 자치단체가 수립한 총 사업들을 세 가지 전략으로 재분류한 결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산업 진흥 부문의 사업은 1,281건, 사업비는 약 21조 4,648억원으로 나타남
-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부문은 총 1,935건으로, 사업비는 약 31조 1,009억원 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부문은 총 1,451 건으로, 사업비는 약 21조 7,617억원임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며 새롭게 도입된 생활인구의 확대 시책을 위한 자치단체의 자율적 노력이 돋보였으나, 정주 여건 조성이라는 인프라 부문 사업이 가장 많이 발굴된 것은 제도 도입 초기단계의 한계로 여겨짐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의의 및 한계

-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핵심 의제가 지역주도성 강화에 있는 만큼, 기본 계획의 수립은 지역 스스로 기획하고 성과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 확립에 기여함
- 계획 수립 주체간 연계 및 협조체계 부족으로 다소 미흡한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0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른 법정계획의 수립

지방소멸로 인한 국가 위기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 마련

- 구 균특법(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1.6. 시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고시로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정(2021.10.)
- 지방소멸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 2022년부터 10년간 인구감소지역 등에 매년 1조원의 재원 지원
- 매 회계연도마다 설치·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2022.5.)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들이 속한 11개 시도 및 국가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수립 특성

-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은 법률적 규정에 따라 유래없는 상향식 계획 수립 절차를 채택
- 시군구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기본 계획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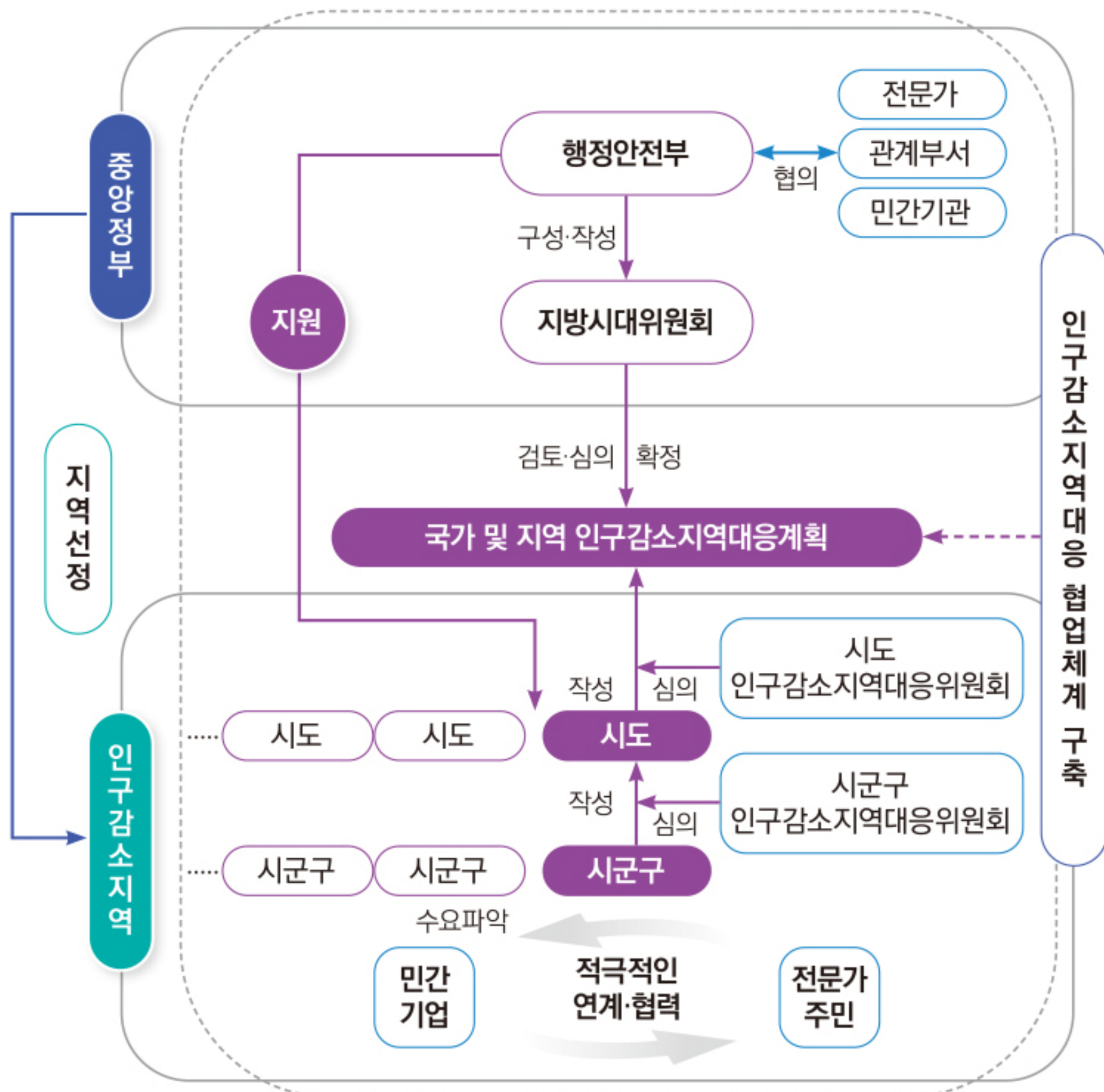
〈표 1〉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구분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단위의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수립 •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략과 우선 추진 중점과제 수립 • 지자체-국가 재정지원 연계 및 생활권 연계협력 추진 • 시군구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마련 • 기본계획 수립시 특별법 제9조에 의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심의 	특별법 제6조
시도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5개년 단위의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 시군구 기본계획 간 효율적인 연계 및 조정 • 국가 및 지자체간 협약 및 시도간 상호 협력 • 기본계획 수립시 특별법 제9조에 의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심의 	특별법 제7조
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 수립 기본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 국가 기본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사항 	특별법 제8조
지역 기본계획 수립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투자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함 	특별법 제20조

출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중 해당 내용 발췌

- 상향식 계획 수립을 표방하고 있는 많은 법정계획들이 실제로는 중앙 행정기관장이 하달하는 지침에 따라 수립하는 절차를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은 실질적으로 지역주도적, 자율적 계획 수립방식을 채택
- 법정계획으로서 필수적으로 담아야 하는 법적 계획내용에 대한 계획 수립 안내서 이외에 중앙정부로부터 어떠한 계획 수립지침도 하달되지 않아, 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겠으나, 지역이 스스로 기획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는 데 가장 큰의의가 있음
- 시군구 및 시도가 수립하는 지역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은 특별법 제9조에 근거를 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로 확정되어 계획 수립부터 확정에 이르기까지 지방분권적 계획 수립 절차를 갖추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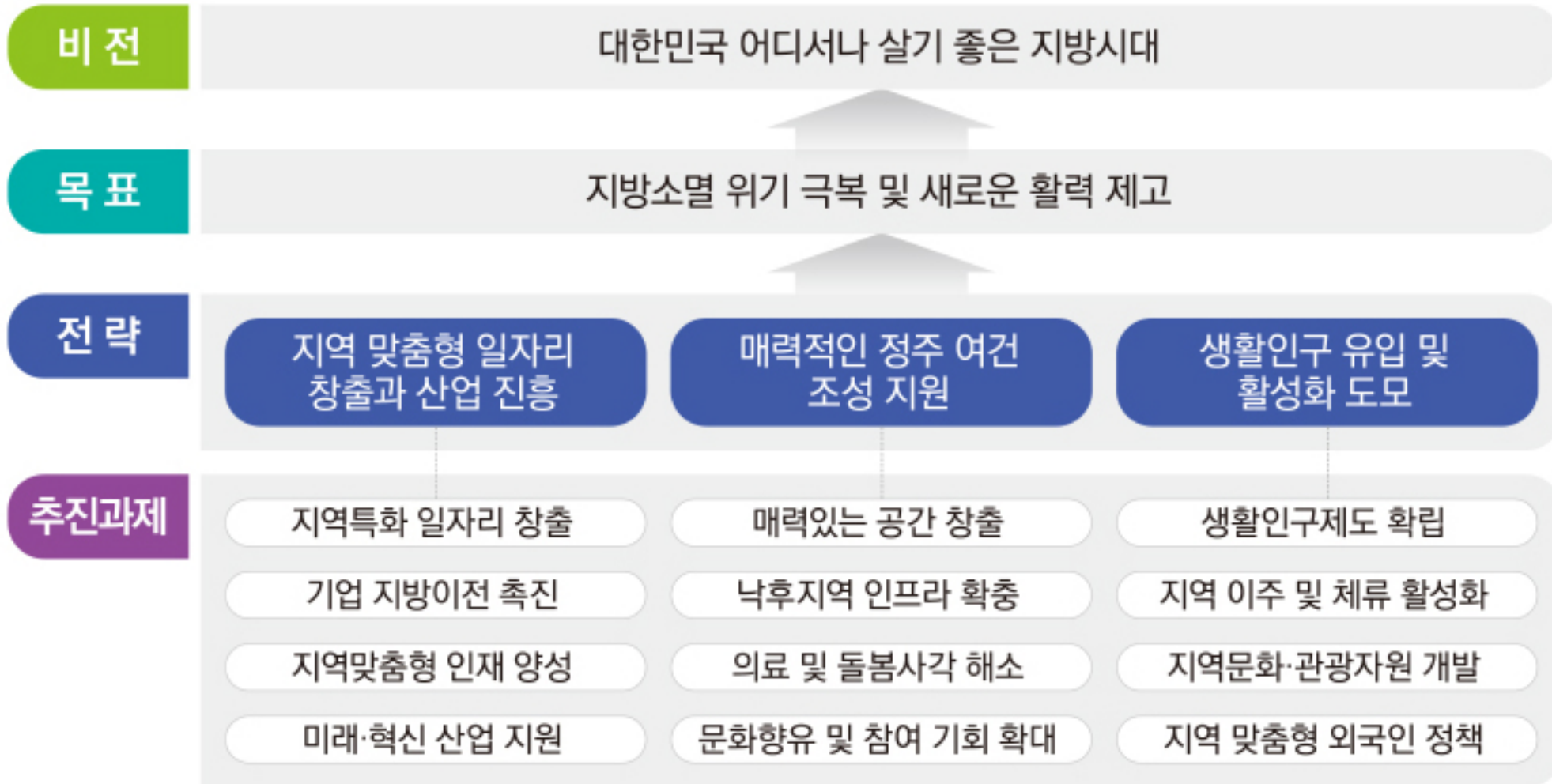
• <그림 1>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절차 •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

- 2023년 12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은 <그림 2> 와 같음
-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을 통하여 비전은 상위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비전과 동일하게 설정한 후, 계획 목표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로 제시
-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1개 시도가 수립한 100개 지역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3대 전략 12대 추진과제를 수립

• 〈그림 2〉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 •



출처: 행정안전부(2023)

02 지역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내용분석

지역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비전

- 2023년 수립된 지역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살펴보면, 기본계획의 수립 의무가 있는 11개 시도 계획의 비전은 〈표 2〉와 같음

• 〈표 2〉 시도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비전 •

구분	비전
부산광역시	• 지역 주도 인구정책 기반의 시민행복 미래도시 부산
대구광역시	• 쾌적하고 행복한, 살고 싶은 인구활력 도시 대구!
인천광역시	•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경기도	•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더 나은 기회의 경기
강원특별자치도	• 새로운 강원! 특별 자치시대!
충청북도	• 삶터·일터·쉼터 창출을 통한 행복터전 구현
충청남도	• 충남다운 매력과 함께, 인구활력 중심 충청남도
전라북도	• 함께 돌봄, 함께 누리, 행복한 전북
전라남도	• 활력타운·일터·꿈배움터·삶터로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전남
경상북도	• 지방시대 인구유입 1번지, 경상북도 K-로컬 전성시대
경상남도	• 경남 미래를 위한 균형과 상생의 재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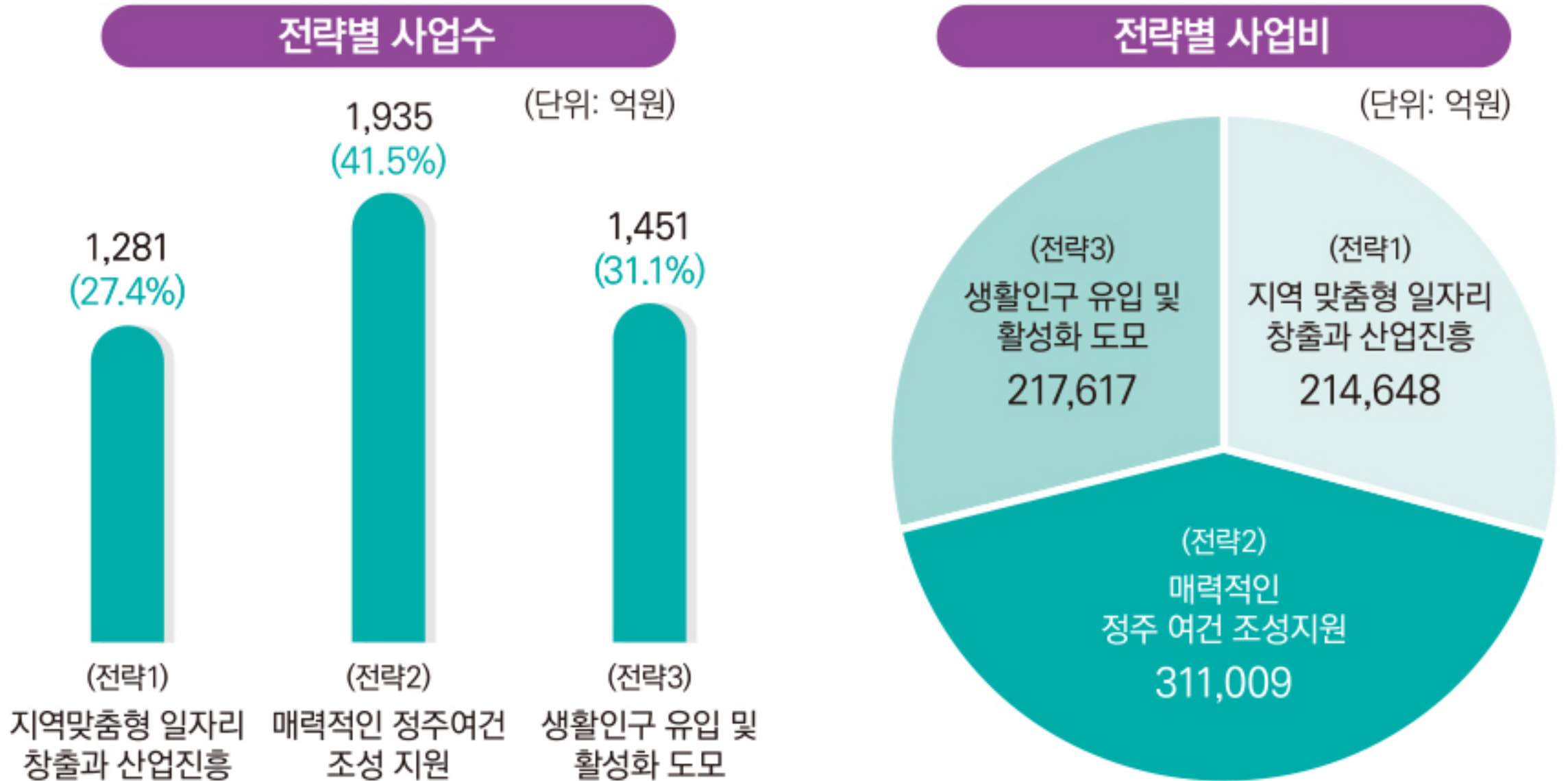
출처: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중 해당 내용 발췌

- ‘지역 주도’, ‘인구활력’, ‘인구유입’ 등 인구감소지역대응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며, 지역특성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의 비전을 수립

지역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전략별 내용분석

- 100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기본계획 내용분석에 따르면, 사업건수는 총 4,667건으로 나타남
- 자치단체가 수립한 총 사업들을 세 가지 전략으로 재분류한 결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산업 진흥 부문의 사업은 1,281건, 사업비는 약 21조 4,648억원으로 나타남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산업 진흥 부문의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지역특화형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이 총 402건으로 가장 많이 수립
- 두 번째 전략인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부문은 총 1,935건으로, 사업비는 약 31조 1,009억원
 -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부문의 세부사업으로는 지역 정착지원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관련사업이 총 800건으로 가장 많이 수립
- 세 번째 전략인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부문은 총 1,451 건으로, 사업비는 약 21조 7,617억원임
 -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부문의 세부사업중에서는 지역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 활성화 전략 관련 사업이 총 661건으로 가장 많이 수립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며 새롭게 도입된 생활인구의 확대 시책을 위한 자치단체의 자율적 노력이 돋보였으나, 정주 여건 조성이라는 인프라 부문 사업이 가장 많이 발굴된 것은 제도 도입 초기단계의 한계로 여겨짐

〈그림 3〉 지역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전략별 사업현황



출처: 행정안전부(2023)

0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의 의의 및 한계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정책의 추진체계의 확립에 기여

- 인구감소지역은 2023년 통합·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저지할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수립된 제도임
-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핵심 의제가 지역주도성 강화에 있는 만큼,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수립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스스로 기획하고 성과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정책 추진체계 확립에 기여

- 지자체 주도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의 중장기적 인구활력 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에 의한 전략적 자원 투입 등 기존의 단편적, 분절적 시책 추진에서 벗어나, 기획적, 종합적 정책 지원의 토대를 갖추게 되었음

Ⅱ 계획 수립 주체간 연계 및 협조체계 부족으로 향후 개선 필요

- 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시, 지자체는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발굴이 저조
-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수립한 시책에 대한 범 부처간 지원 및 협조 부족
- 지역의 자율적 정책추진에 기반하되,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에 한해서는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등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지자체-부처간 및 부처간 상호 협업체계 구축 및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상호 연계되어 있지 않은 지방시대위원회와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간 연계 강화 방안 모색

출처 : 이소영 지역균형발전실장

정책브리프Ⅲ

기업 천국 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김 태 윤 양 지 원 |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기업 천국 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강원도가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로 선정되었다. 이 특구에서는 ‘안되는 것 빼고 모두 허용’되는 네거티브 규제적용을 받는다. 현행의 ‘되는 것 빼고 모두 불허’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에 비해 허용되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 보건의료 데이터 분야는 환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를 다루므로 데이터 보안과 규제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데이터 관련 규제의 정비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완성형 데이터는 전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거티브 규제도입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 관건은 네거티브 규제의 세부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이다. 우선 보건의료 데이터 혁신특구 구축에 필요한 전략적 수요를 종합하여 네거티브화 법령체계를 제안해야 한다. 이때 상하위 법령, 타 부처 연관 규제의 정비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규제개혁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또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한 규제대안을 조합해야 한다. ‘선허용-후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나 저강도 규제로의 전환이 규제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01 글로벌 혁신 특구란?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

-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여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
 - 신제품의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 허용
 - 다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 우선 적용

글로벌 혁신 특구, 기존 규제자유특구와 무엇이 다른가?

글로벌 혁신 특구		규제자유특구
·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 국제기준에 맞는 실증, 인증, 허가, 보험제도 적용 구역	정의	· 포지티브 규제 (최소 허용 규제) · 규제특례 적용 구역
·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네거티브 규제 특례 적용	실증특례 적용	· 기업이 실증특례를 요청할 때 관계부처에서 허락해주는 방식
· 기업이 금지·제한목록 검토 후 사업추진	신속확인	· 실증사업 신청 후 소관 부처의 규제 확인
· 최대 30일	허가처리기간	· 최대 120일
· 무과실 책임	책임보험	· 고의 또는 과실책임

-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는 최소 허용 규제(포지티브) 방식으로 부여
- 규제자유특구는 실증을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기업이 먼저 요청하고 관계부처에서 허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
- 반면, 글로벌 혁신 특구는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적용
 - 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해 「지역특구법」 제4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
 - 다른 법령에서 형벌 등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목록으로 작성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
 - 해외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와의 협력 및 국제 공동기술개발(R&D)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

- 기존 규제자유특구에 비해 실증이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

강원, 글로벌 혁신 특구 지역 선정

- 강원·부산·충북·전남 4개 지역 선정

지역	특구명	육성산업	목표
강원	보건의료데이터	보안·표준화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SI진단 및 의료기기 산업	유니콘 기업 1개 육성 수출 23억 달러 달성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산업	딥테크 유니콘 1개 이상 육성 딥테크 기업 40개 육성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자가세포 의료 관련 산업	글로벌 유니콘기업 1개 육성 중소벤처기업 60개 유치
전남	에너지신산업	직류배전망 플랫폼 산업	직류배전망 플랫폼 시장점유율 5% 달성 세계 1등 제품 3개 이상 달성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3.12.28.), '글로벌 혁신 특구' 부산·강원·충북·전남 선정

- 강원도,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혁신특구' 조성 계획
 - AI로 의료데이터를 활용·가공 시 적용되는 규제를 명시하고 나머지를 모두 허용해 관련 초격차 기업들을 육성
 - 보안·표준화된 의료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조성 지원
- 정부, 향후 '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를 조성할 계획

02 강원 글로벌 혁신 특구 추진 배경 및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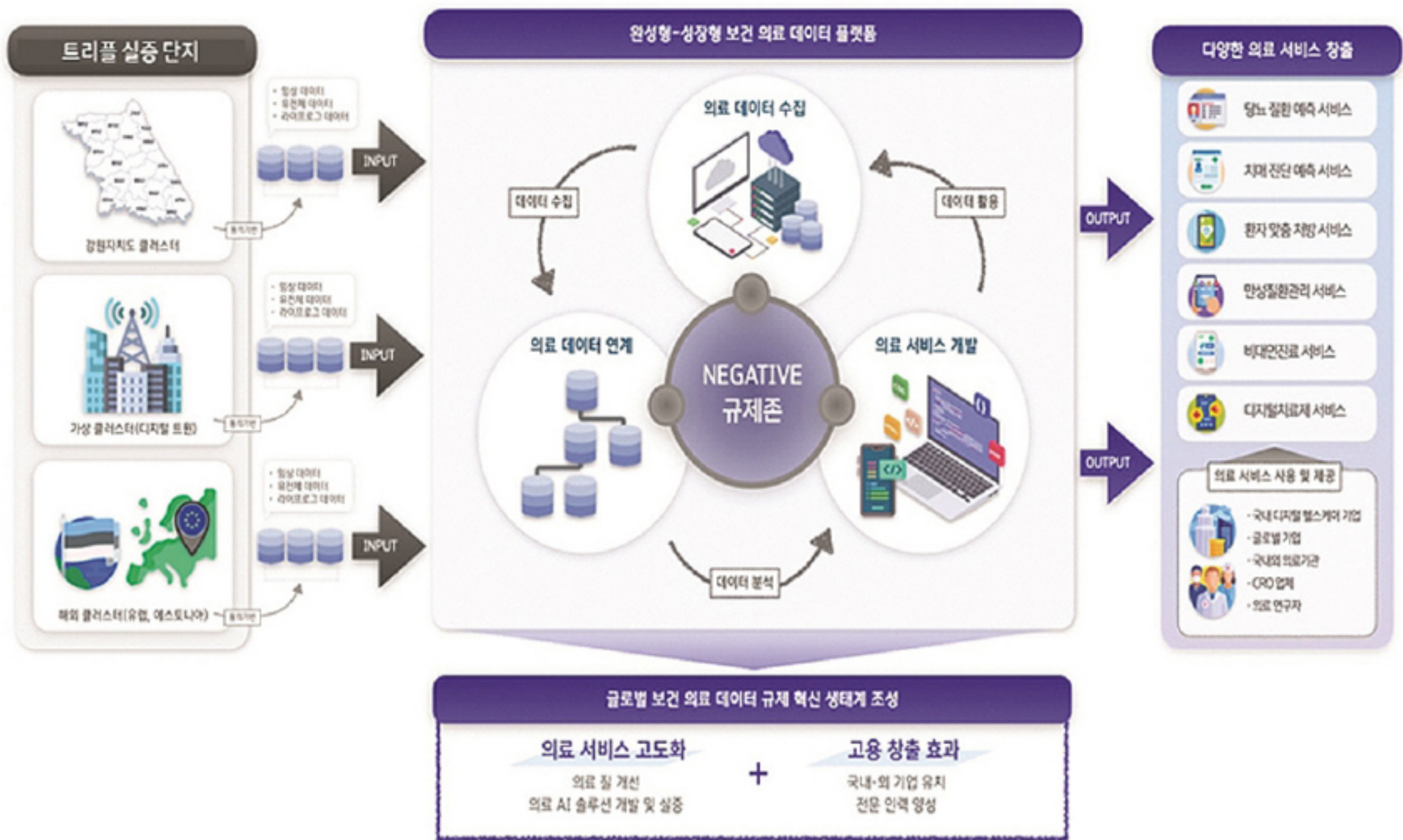
보건의료데이터 산업, 왜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이 필요했나?

- 환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를 다루므로 데이터 보안과 규제 준수가 매우 중요한 보건의료 분야
- 현재 국내 데이터 관련 규제의 정비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
- 데이터 3법 개정 등을 통해 산업적 활용을 추진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산업현장에서 활용은 미미
- 현재 활용되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도 분절적(유전체, 임상정보, 라이프로그 데이터 개별적)으로 실제 통합된 완성형 데이터는 전무
 - 글로벌 특구 지정으로 네거티브 규제도입을 통해 완성형 의료데이터 구축과 산업적 활용 기대

강원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특구 사업계획

- ① 보건의료 데이터 트리플 실증단지(국내·국외·가상) 조성
 - 국내 :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 리빙랩 연계 데이터 구축으로 규제 혁신 실증 단지 조성
 - 국외 : 해외 보건의료 디지털헬스 혁신 클러스터 협업
 - 가상 :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시공간적 한계 극복 임상 플랫폼 구축

- ②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데이터 보안 환경 구축·운영
 - 데이터안심존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 데이터의 보안 환경 구축
- ③ ‘강원 글로벌 혁신 특구 추진단’ 구성·운영
 - 규제 해소 및 글로벌 혁신 특구의 기획, 실행 및 성과관리, 수출지원 등 전주기 협력을 통한 관리 및 운영 추진
- ④ 해외 클러스터 협업 네트워크 및 글로벌 임상 참여 시스템 구축 등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2023.12.28.)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 부산·강원·충북·전남 선정

03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글로벌 특구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나 네거티브 규제목록과 법령체계를 구체화해야 하는 상황으로 향후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준비 필요

규제 네거티브화 대상 규제 선정

- 보건의료 데이터 혁신 특구 구축에 필요한 전략적 수요를 종합하여 네거티브화 및 규제대안의 적용이 필요한 규제사무들을 집대성하고 체계화
- 상하위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타 부처 연관법령 조사를 통해 규제 네거티브화 대상규제 선정
 - 연관 규제의 정비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규제개혁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움
 - 개별부처 입장에서 소관 법령만 정비하는 기존방식으로는 피규제자들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움

-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 실질적 규제개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화 대상이 되는 규제뿐만 아니라 해당 규제와 연관된 규제법령을 함께 정비할 필요

네거티브화 대상 규제개선안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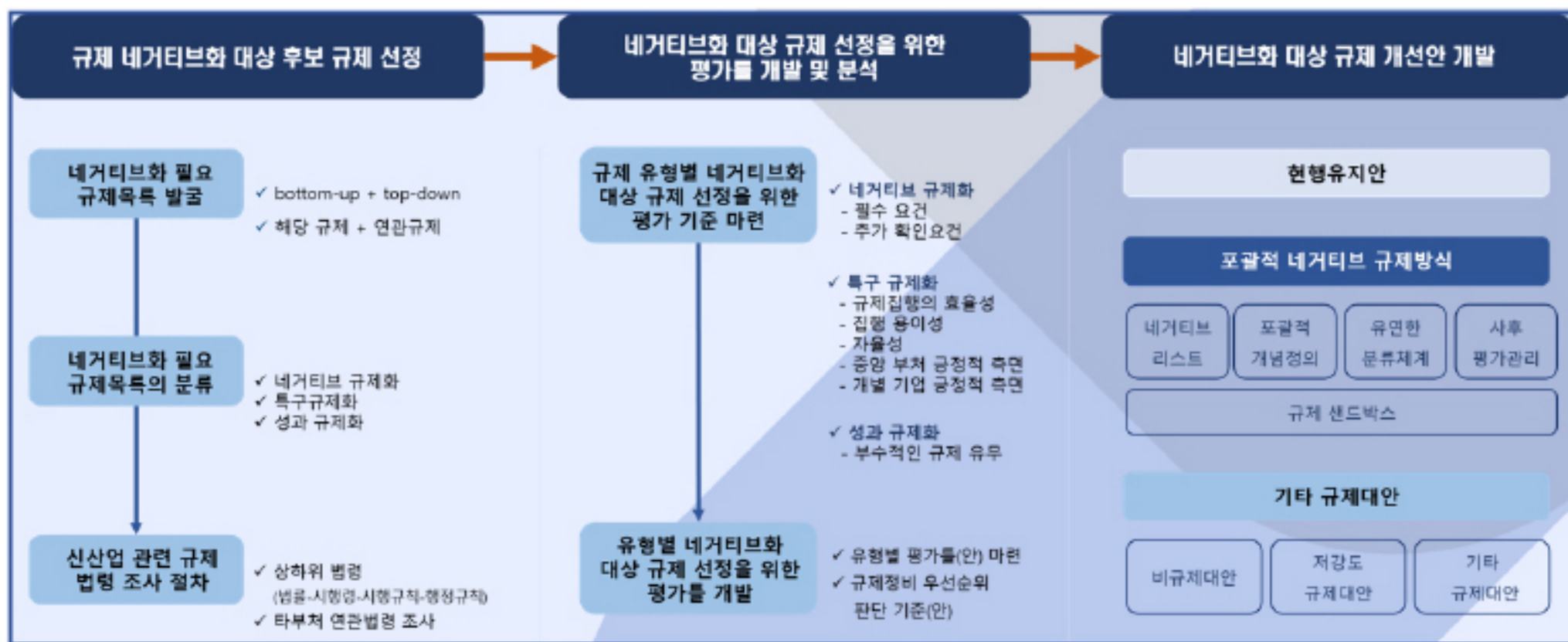
- 법령 대안별 네거티브화 대상 규제 도출과 최적 형태의 규제 대안 조합을 통해 다양한 정책대안 수립
-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네거티브화 대상 규제 개선안 개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네거티브 규제를 포함한 다양한 규제 대안 탐색

-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먼저 허용한 후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선허용-후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나 저강도 규제로의 전환이 규제 대안이 될 수 있음

전면 네거티브 규제특례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체계 제안

- 법률체계 일반 검토
 - 열거주의가 보편적인 우리나라 법체계상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는 섬세하고 미묘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제반 이슈들의 법률적 검토 필요
- 규제 대안별 성공·실패요인 분석
 - 네거티브 조항 관련 대안들의 실증적 성과를 분석하여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파악하고 법률적 함의 도출
- 네거티브 조항 도입 법령체계 제안
 - 글로벌 혁신 특구의 성공적인 실증환경 구축을 위한 네거티브 조항 관련 대안들의 제도적 장단점을 분석
 - 해당 과정에서 전문가, 기업체, 지자체의 숙의 과정 필요



출처: 제15회 기업천국세미나 ‘글로벌 혁신 특구와 규제’ (2024.02.20.) 발표내용

알기쉬운 정책 I

“여러분의 작은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범정부 대표 국민소통 창구 5곳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범정부 대표 국민소통 창구 소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해소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www.110.go.kr

정부 업무에 대한 궁금증과 민원 상담·안내

☎ 전화·문자상담 : 국번없이 110

☎ 화상수어·채팅상담 : 110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 SNS상담 : 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center)

☑ 카카오톡 채널 상담 : 국민톡110

☑ 상담 시간 : 365일 24시간(화상수어상담 평일 09~18시)



고충해소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민원 신청 및 제안 제출, 정책참여 등 다양한 국민소통기능을 One-stop으로 이용 가능

☑ 참여 방법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



제도개선

국민생각함



idea.epeople.go.kr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한 곳에 모아 정책과 제도로 실현시키는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 주요 특징

- 국민의 생각을 대화 투표·설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시켜 완성
- 다양한 생각들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한 눈에 쉽게 확인

☑ 참여 방법

- 국민·공직자·기관 누구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접속 후 자유롭게 생각 공유·확산



제도개선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bigdata.epeople.go.kr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 민원정보 공개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수집 민원을 기반으로 한 각종 통계 및 민원분석정보 제공
- 주/월간 민원 동향 등 분석 보고서 내려받기 가능

☑ 공공데이터 개방

- 개인, 기관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 통계, Top 민원 키워드 등 16종 open API 데이터 개방



부패방지

청렴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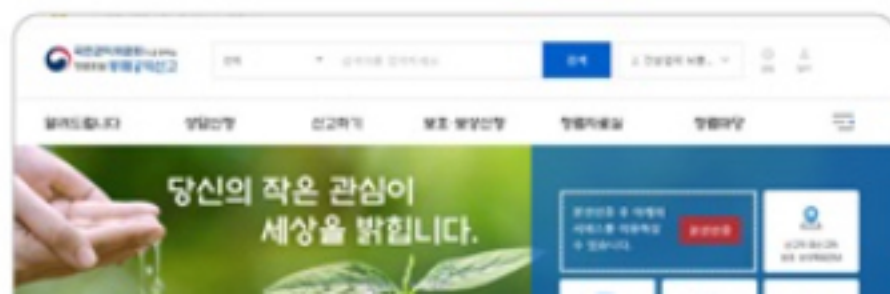


www.clean.go.kr

부패·공익침해행위 상담, 신고부터 보호·보상 신청까지 연결된 원스톱 통합 플랫폼

☑ 참여 방법

청렴포털 홈페이지



☎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98



출처: 정책브리핑 카드/한컷(국민권익위원회)

알기쉬운 정책 II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 (2023-2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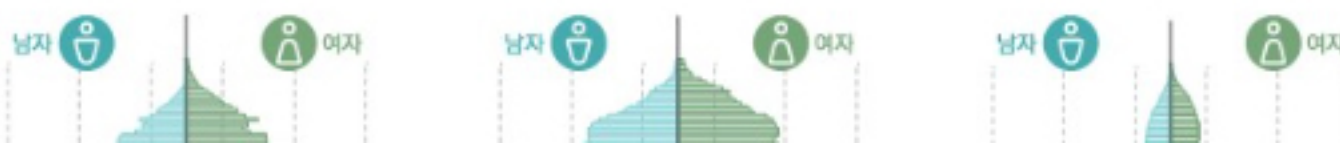
산업자원농수산팀
유재국 입법조사관
보건복지여성팀
박선권 입법조사관

입법조사처는 합계출산율 변화에 따른 인구 규모 변화를 예측하였는데 그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인구 붕괴를 막기 위한 전례없고 과감한 저출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23년 전국 연말 총인구는 약 5,129.3만 명으로 추정되고,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합계출산율이 0.6명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2073년에 2,364.9만 명으로 2023년 대비 46.1%, 2123년에 514.1만 명으로 2023년 대비 10% 수준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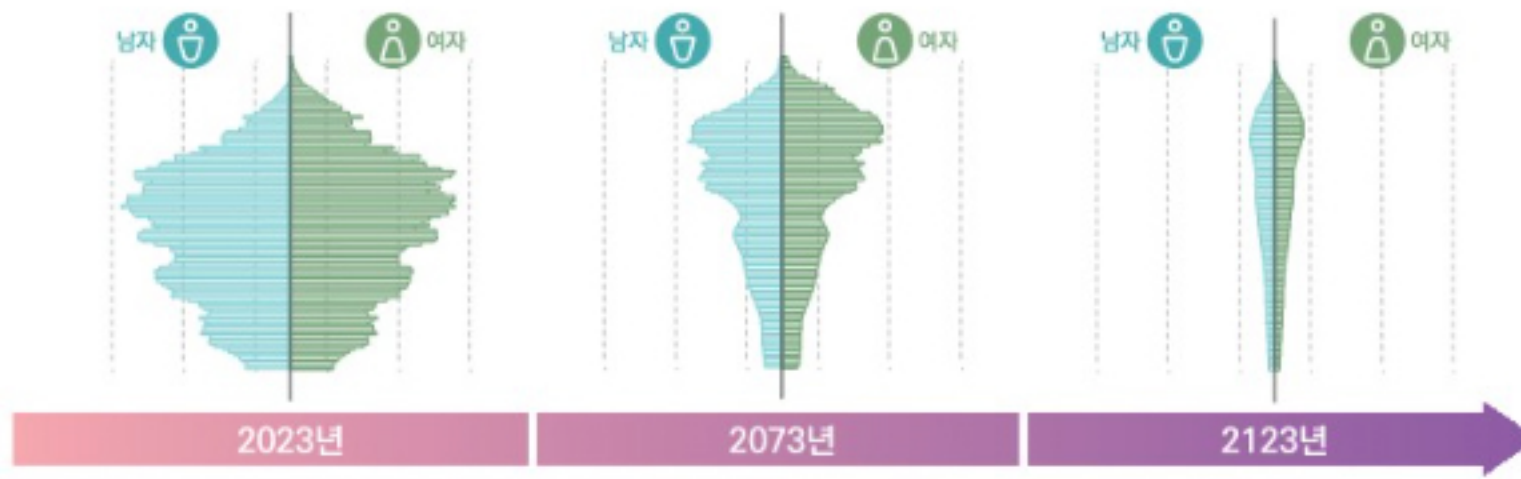
시나리오

동저위	동중위	동고위
인구이동 있으며 모(母)의 연령대별 출산율이 2025년까지 90%로 하향 후 유지함	인구이동 있으며 모(母)의 연령대별 출산율이 2025년까지 90%로 하향 후 2030년까지 2022년의 1.3배로 회복	인구이동 있으며 모(母)의 연령대별 출산율이 2025년까지 90%로 하향 후 2050년까지 2022년의 2배 증가
2023년-2050년 기간 평균 합계출산율 0.74명	2023년-2050년 기간 평균 합계출산율 0.91명	2023년-2050년 기간 평균 합계출산율 1.11명
정저위	정중위	정고위
인구이동 없으며 모(母)의 연령대별 출산율이 2025년까지 90%로 하향 후 유지함	인구이동 없으며 모(母)의 연령대별 출산율이 2025년까지 90%로 하향 후 2030년까지 2022년의 1.3배로 회복	인구이동 없으며 모(母)의 연령대별 출산율이 2025년까지 90%로 하향 후 2050년까지 2022년의 2배 증가
2023년-2050년 기간 평균 합계출산율 0.77명	2023년-2050년 기간 평균 합계출산율 0.94명	2023년-2050년 기간 평균 합계출산율 1.15명

인구피라미드 (동중위 시나리오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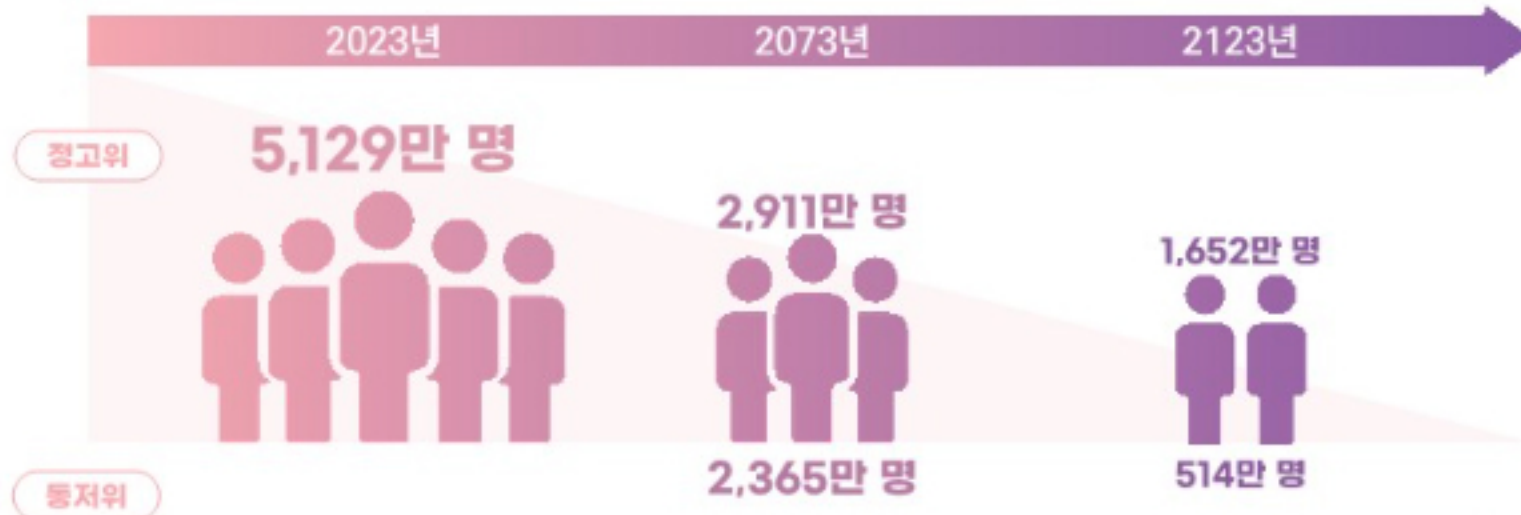


인구피라미드 (동중위 시나리오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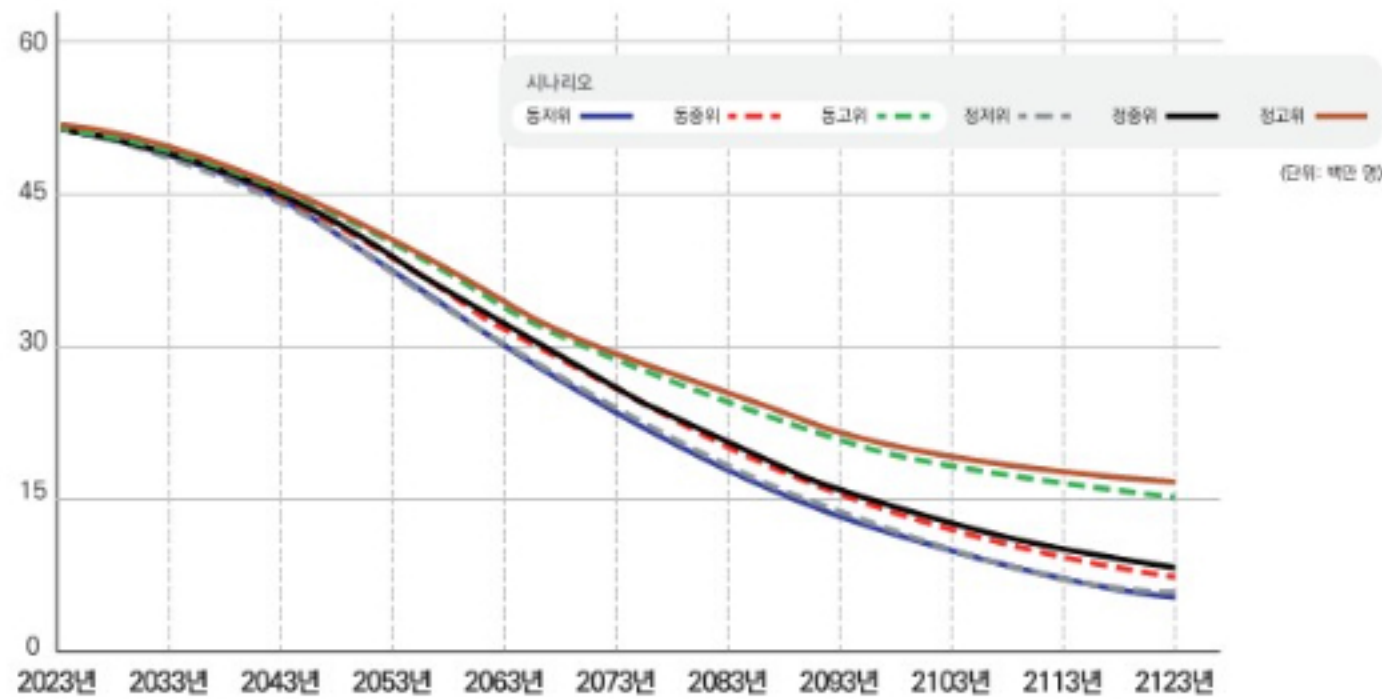


1/4

총인구 변화 예상



- 시나리오별로 50년 후인 2073년 총인구는 2023년 대비 46.1%에서 56.8% 규모로 감소
- '동중위' 기준으로 2023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2,552.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2023년	2033년	2045년	2055년	2073년	2123년
동저위	5,129.3	4,876.8	4,294.2	3,605.6	2,364.9	514.1
동중위	5,129.3	4,911.7	4,384.5	3,731.0	2,552.8	759.4
동고위	5,129.3	4,909.5	4,451.0	3,892.5	2,857.2	1,519.3
정저위	5,129.3	4,880.3	4,309.4	3,626.3	2,390.7	543.7
정중위	5,129.3	4,915.8	4,403.3	3,756.7	2,588.1	809.8
정고위	5,129.3	4,913.6	4,473.5	3,925.7	2,911.4	1,651.6

2/4

인구 지표의 변화 예상

가구수 2023년 2073년 2123년

정고위

2,194만 가구



1,331만 가구



692만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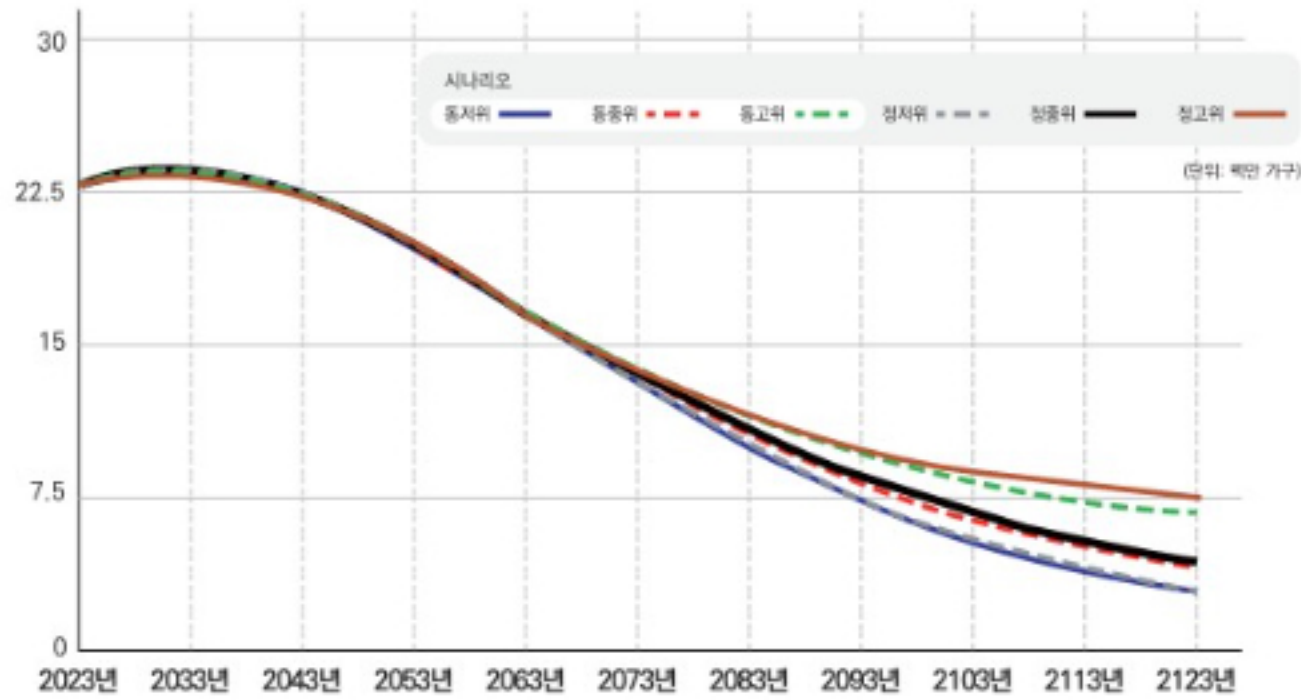


동저위

1,221만 가구

262만 가구

- 시나리오별로 50년 후인 2073년 총가구는 2023년 대비 55.6%에서 60.7% 규모로 감소
- '동중위' 기준으로 2073년 가구수는 1,271.4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2023년	2033년	2043년	2053년	2073년	2103년	2123년
동저위	2,194.1	2,271.5	2,159.7	1,887.8	1,220.6	492.7	261.5
동중위	2,194.1	2,271.5	2,159.8	1,895.9	1,271.4	598.2	369.3
동고위	2,194.1	2,271.5	2,159.8	1,895.7	1,319.8	784.9	642.8
정저위	2,194.1	2,260.6	2,149.8	1,885.3	1,229.5	511.6	279.5
정중위	2,194.1	2,260.6	2,150.0	1,893.7	1,281.2	622.4	395.4
정고위	2,194.1	2,260.6	2,149.9	1,893.5	1,330.8	819.9	692.4

3/4

총 부양비 변화

시나리오 동저위 동중위 동고위 정저위 정중위 정고위



총 부양비

$$\text{총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 (0-14세)} + \text{노인 인구 (65세 이상)}}{\text{생산 가능 인구 (15-54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출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적극 추진

-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세대간 고용격차 해소
- 출산과 주택정책의 연계 강화
- 과도한 사교육 비용 해소(공교육 혁신)
- 경제적 렌트가 큰 직업군에서 사회적 기여와 개인적 보상간 격차 축소

개인 and 국가의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

- 가족·육아·아동에 대한 친화적 담론을 통하여 출산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재형성
- 개인의 행복(아이를 키우는 기쁨)과 국가 발전의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NARS info는 입법 및 정책 현안을 조사·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의 핵심 내용을 인포그래픽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원문 자료 | 유재국·박선권,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 『NARS 입법·정책』 제146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 12. 29.를 인포그래픽으로 구성함

발간등록번호 | 31-9735025-001894-14 e-ISSN | 2799-3027 Copyright©NARS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제60호 | 발행일: 2024년 3월 11일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박상철 | 02-6788-4524 | www.nars.go.kr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4/4

출처: 산업자원농수산팀 유재국 입법조사관, 보건복지여성팀 박선권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